

# 日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출범

### 여야 5당, 이번주 내... 정부, 홍남기·강경화 등 4명 정치권은 각 당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전경련은 제외 결정 "경제단체 기능 못한다 판단"

여야 5당은 29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민관정이 참여하는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명칭을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로 정하고 이번 주에 출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급주 중에 1차 회의를 하고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오전 회동에서 '참여 범위'를 놓고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 결과 여야는 참여인원으로 민간 경제단체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단체로서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해 제외하기로 했다. 또 노동단체로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민간참여의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에서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는 조경식 정책위의장, 한국당은 정진섭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민주평화당은 미정이다.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획재정부가 실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간단체에 전경련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경제 5단체로 불리는 전경련이 포함돼있지 않다. 최근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보니 회원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경제단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회의 의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하기로 했고 기구의 운영과 기본적인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바른미래당 임재훈·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등 5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회동을 마친 뒤 회동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 20만 넘어

### "日 극우 여론전에 이용" 청와대 답변 기준선 넘겨 청원인 "보도의 자유 방자, 거짓뉴스로 여론 왜곡"

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2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 허가 취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 6648명이 동의했다. 최초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정부에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폐간 처분을 해주실 것과, 계열방송국인 TV조선 또한 개국 허가를 취소해주시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마감을 10여일 앞두고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기준선을 충족시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조선일보의 경우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방자해 거짓뉴스

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를 서슴지 않고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 또한 연일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뉴스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방송국 설립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6월 20만명을 돌파했던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과 관련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언급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제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 차례 제시한 바 있다. /뉴시스

## 여야3당, 7월 국회 합의... 내달 1일 본회의서 추경 등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9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안보국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뤘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내일부터 안보국회

의 일환으로 운영위와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개최하고 최근의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일부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추경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 "농심 새우깡, 수입산 꽃새우 사용 철회하라"

### 민주당 군산지역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자로서 명성 잃고 농심 불매운동 확산될 것"

최근 국민과자라고 불리던 농심 새우깡의 원료인 꽃새우 수입산 사용 논란에 불매 운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군산지역 어민들과 지역 정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는 29일 '농심 새우깡은 진정 국민과자를 포기하려는 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지역위원회는 "농심은 서해바다의 꽃새우 환경오염 주장과 군산 꽃

새우 수매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며 "민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과자로서의 명성을 잃고 전 국민적 저항운동인 농심 불매운동으로 확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지역위는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꽃새우의 사용 중단이 환경오염 문제라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꽃새우와 비교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며 "서해바다를 먹거리로 살아가는 군산, 김제, 부

안, 고창 등 전라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위원장은 "군산 꽃새우를 포기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에서 저지르고 있는 경제 보복과 이번 농심 꽃새우 수입산 사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평화당 조배숙 의원, 31일 국회대표단 자적 일본 방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전라북도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작기계, 정밀화학 분야 소재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달 초 수출규제 발표 이후, 한일 양국은 접점을 찾기 못한 채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대화 자체를 회피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국회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진성기자

## 민주, 총선 인재영입위 내달 출범

### 당대표 1인 체제 운영에 "전혀 확인되지 않아 '사실 무근'" 양정철 물밑 작업에 "이해찬, '말 많은 사람은 빨 것' 발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인재영입위원회를 오는 8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맡는다. 홍익표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재영입위 출범식은 늦어도 8월 중순에 하려고 한다"면서 "일례 이달 말 출범하려고 했는데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선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미뤄졌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인재영입위가 당대표 1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다. 당대표 1인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재영입위가 꾸러진 뒤 위원 공개 여부는 논의해야 한다. 부담을 느끼는 외부 위원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절한 시점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인재 영입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양 원장이 인재영입위에 들어오지 아닐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말 많은 사람은 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다. 이어 "자이든, 타이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연구원 양 원장이나 백원우 부원장 등이 (인재영입위원으로) 거론되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부인했다. 홍 대변인은 야당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 하면서 일종의 체리피킹(좋아하는 것만 골라 선택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파행시켜놓고 자신들만 원하는 상임위원회만 개회하는 게 어디 있는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필요한 상임위원회만 여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얼마나 많은 조건을 걸었느냐"면서 "8월이 넘어가면 내년 본예산과 추경을 짜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며 조건 없는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9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 2019년 8월 3일(토) 오후 2시  
장소 | 중부비전센터

주최 |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전북지방자치TV  
후원 | 동아보건대학미술학과,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8-9700